

성경에 나타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사상

-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중심으로 -

김재민



국문요약

성경에 나타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사상
-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중심으로 -

범죄행위로 인해 육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범죄 피해자는 근현대 형사사법체계 속에서 범죄자보다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다행히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이 범죄피해자의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아직 충분한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는 정비되고 있지만 이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그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핵심사상을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에는 강도를 당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자에게 공식적 대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임에도 초기대응에 실패하여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몰고 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런 법적, 공동체 윤리적 보호책임이 없는 자임에도 초기대응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을 구원하였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피해자의 참 이웃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의 핵심사상은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범죄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타인을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할 줄 아는 정신, 그것이 바로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기본철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범죄피해자, 인권, 이웃, 피해자보호, 사랑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이웃의 대응 방식
- III.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이웃의 대응 분석
- IV.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
- 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세계 각국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 문제를 체계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고대국가가 성립된 이후 중세시대를 지나 각 나라들이 강력한 근대국가의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갖추게 되면서부터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어 그들의 인권보호가 취약해지는 현상이 최근 20세기 중반까지도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범죄행위가 피해자 개인에 대한 위해행위라기보다는 국가 전체에 대한 해악이라고 보아 국가는 범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일에 치중했기에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당하는 고통에 대하여 한 국가와 사회가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다(Doerner and Lab, 2002: 3; Jerin and Moriarty, 2010:7).

다행히 20세기 중반 이후 국제사회에서 피해자 인권문제가 새롭게 조명되면서 세계 각국에서는 ‘피해자 인권 보호운동(victim movement)’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각 나라 정부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령 제정과 동시에 범죄피해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목표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기도 하였다. 1985년 UN이 ‘범죄피해자와 권력남용에 대한 사법정의를 위한 기본원칙 선언’을 발표한 점이 나¹⁾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세계 여러 국가들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부조직을 설치하고,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국적 민간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피해자문제에 공동대응 하게 된 것도 피해자 인권보호 사상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이라 하겠다.²⁾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5년 범죄피해자

1) 원 명칭은 “UN Declaration of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of Crime and Abuse of Power”이다.

보호법을 제정하는 한편, 형사소송법 및 관련 특별법을 개정하여 다양한 피해자 보호 시책을 펼치고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피해사건을 다루는 관계자들의 무관심과 대응 미숙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이 있다. 폭력 피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판결문을 가해자에게 송부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신변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최근의 언론보도가 그러한 실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⁴⁾ 이것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의 틀이 아무리 잘 갖춰져도 그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는 사람의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피해자 보호의 본질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 고 있는 것이다.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본질은 바로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자 대계명 중의 하나인 ‘이웃 사랑’에 담겨 있는바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와 이웃 사랑의 상호관계를 잘 나타 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신약성경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시하고 계신 ‘선한 사 마리아 사람의 비유’(누가복음 10:25-37)이다.⁵⁾ 이 비유는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자를 목격한 자의 부작위 행위가 어떠한 법적·도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 그 리고 그 부작위에 대하여 어떤 ‘개인적 책임(personal liability)’을 물을 수 있는

2) 영국 내무성의 ‘범죄피해보상위원회(CICB), 미국 법무성의 ‘범죄피해자 대책실 (OVC)’처럼 각 나라들은 현재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각의 정부기구를 갖 추고 피해자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해 결성된 전국 적 민간 네트워크 조직으로서는 미국의 NOVA(National Organization of Victim Association), 영국의 VS(Victim Support), 독일의 Weisser Ring, 일본의 NAVS(범죄피해자유가족 전국연합) 등이 대표적이다.

3)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신뢰관계 있는 자와의 동석권’,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하는 한편, 2013년 성폭력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의 변호사 선임권 보장,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해 줌으로써 피해자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16000572&md=20150716115118_BL, 헤럴드 경제뉴스, 2015.7.16.자 기사, “피해자 인권은 없다”, 2016.2.12. 검색).

5)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물건을 빼앗기고 거의 죽도록 폭행을 당한 후 길가에 버려져 있는 상황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지도층 인사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지나갔지만 유대인에게 천시 받던 사마리아인이 동정심을 가지고 자선을 베풀어 생명을 살렸다는 것이 그 요지로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참 이웃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 제시한 예수님의 비유이다.

가에 대한 논쟁을 촉발할 수도 있지만(Marshall, 2013:242),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적 측면에서 비유 속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제사장 및 레위인이 범죄피해자의 중요한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그들 각각의 대응자세를 분석하고 비판해 봄으로써 피해자 인권보호 정책개발에 대한 유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이웃의 대응 방식

1. 주요 개념의 정립

(1) 범죄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정의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범죄피해자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범죄피해자의 개념과 관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법률 제 12779호)’은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동법 제3조)”를 의미한다고 비교적 넓게 정의하고 있다. 반면, 형사소송법은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자”만을 범죄피해자로 보고 있다(동법 제 223조, 제225조).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면 피해자 개념을 넓게 확장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이나⁶⁾ 성경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는 범죄로 인해 직접 피해를 당한 좁은 의미의 범죄피해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인권이라 함은 따와 장소에 무관하게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보편적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권은 국내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국제법상의

6) 피해자 개념을 좁게 잡으면 범죄 이외의 사유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국가가 외면할 우려가 있고 피해자 범위를 넓게 잡으면 현실적으로 예산·인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피해자 보호가 구호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에 사회정책적 목표로서의 피해자보호와 형사정책적 목표로서의 피해자보호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바(김용세, 2009:48),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 개념을 범죄피해를 입은 자와 인권침해를 당한 자에 국한하고자 한다(Kirchhoff and Morosawa, 2009:286; 김재민, 2012:53-54).

인권개념을 포함하며 더 나아가 자연권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권리개념이다(정재길 외, 2010:64). 범죄피해자의 인권에 포함되는 헌법상 기본적 권리의 내용은 일반 시민이 헌법상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즉, 범죄피해자에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평등권(헌법 제11조), 신체에 대한 자유권(헌법 제12조),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헌법 제17조), 양심에 대한 자유권(헌법 제19조), 언론·집회·결사의 자유권(헌법 제21조),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등이 보장되어 있다. 이 밖에 헌법상 범죄피해자만을 위한 권리로서 ‘범죄피해자구조금 청구권(헌법 제30조)’ 및 ‘법정진술권(헌법 제27조 제5항)’ 등도 있다. 이 중에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는 범죄피해자가 향유해야 할 기본적 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⁷⁾

(2) ‘이웃’의 정의

‘이웃’의 사전적 정의는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⁸⁾ 이 개념은 다분히 거리적으로 가까워야 한다는 의미와 함께 근거리 지역에서 거주하며 살아야 한다는 지역주민으로서의 친밀감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웃 개념이 이처럼 반드시 자신과 가까운 거리에서 거주하는 지역민이어야만 이웃이 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서로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를 도와 주어야 할 법적, 종교적 의무를 지닌 자가 있다면 이들 상호간에 이웃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출애굽기 22:25, 신명기 22:1-4, 23:24-25, 24:12-13),⁹⁾ 설사 법적

7)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개별 기본권마다 다를 수 있기에 사법기관의 판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학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그러나 대체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으로 보거나 그 본질적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김철수, 2004:356-357).

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2016. 1.19 검색).

9) 위 각주 구약성경 본문에서는 ‘이웃’이라는 표현대신에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을 의미하는 이 두 용어를 상호 혼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일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의미에서 형제와 이웃은 같은 의미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율법사는 자신의 동족만을 이웃으로 본 것으로 보인다(정중은 역,

· 종교적 의무가 없다 할지라도 인간애에 기초하여 잘 모르는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서로 이웃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레위기 19:10, 신명기 10:19).¹⁰⁾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 개념은 바로 후자의 이웃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바, 이는 이웃이라는 인간관계가 지리적 근접성·사회공동체의 동질성·법적 의무감 및 종교규율적 책무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이든지간에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범죄피해자 인권보호가 가능한 이웃의 유형

우리 주위에는 사회구성원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다. 범죄피해자를 포함하여 노약자, 장애인, 아동, 외국인 등이 그러한 부류에 속하는바 이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인권상황에 있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긴요한 자들이다. 이 중에서도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말미암아 인권이 침해된 자, 곧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된 자들로서 범죄피해 유형에 따라서는 국가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신속히 개입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기상황에 처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웃은 누구인가?¹¹⁾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 성경이 이웃 사랑을 성도가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레위기 19:18, 신명기 23:24-25, 24:12-13, 24:21, 마가복음 12:31).¹²⁾ 둘째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법적 의무로 이행해야 하는

1996:140). 그러나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이웃의 범위를 동일 민족에게 국한하지 않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상호간’으로 크게 확장시켰다.

10) 레위기 19:10에서는 가난한 타국인을 위한 배려를, 신명기 10:19에서는 나그네에 대한 배려를 명령하고 있다. 동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자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구약의 율법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11) 누가복음 10장의 비유에서 율법사가 자신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이웃이 누구인지 ‘타인의 정체성’에 관해 주안점을 두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과연 타인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그 주안점을 바꾸었다고 한다(Marshall, 2013:252).

12)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그 이웃에게 물건을 꾸어주더라도 전집물을 가지고 자지말고 해질 때에 반드시 그 전집물을 돌려주어 옷을 입고 자도록 하라는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는 법률·의료·심리 전문가들이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적 자산과 전문적 지식으로 피해자를 보다 용이하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피해자와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웃이 될 수 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6조). 범죄피해를 당한 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우며 무너진 자아상으로 인해 주변사람들과의 친화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기까지 주변인들이 안내해주고 심리적 지지를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다.

2. 공감 유형에 따른 이웃의 대응 방식

(1) 공감능력과 인권보호의 상호관련성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제대로 확보되려면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규정과 관련 제도 등을 잘 갖추어 놓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범죄피해자의 고통에 잘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범죄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 하여도 사회구성원들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이 미흡하면 제정된 법이나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없는 것이다.

로먼 크르즈나릭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로서는 편견(偏見, 정형화 된 틀에 매이는 것), 권위(權威, 명령이나 규율을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 거리(距離, 공간적 거리로 인해 무관심해 하는 것), 부인(否認, 언짢은 상황에 대하여 못 본 체 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김병화 역, 2013:84-99).¹³⁾

이나 포도원의 포도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한 배려로서 이웃사랑의 구체적 방법론에 해당한다.

- 13) 범죄통제 우선정책이라는 전통적 형사사법의 틀에 매여 피해자의 고통을 보지 못하는 것(편견), 다른 지시나 명령, 규율을 중시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피해자 보호를 경시하는 것(권위), 자기와 거리가 먼 지역의 범죄피해 상황에 대하여 둔감해 지는 것(거리), 범죄피해 사실이 불쾌감을 불러 일으켜 의도적으로

그렇기에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위의 ‘편견’과 ‘권위’와 ‘거리적 한계’, 그리고 의도적 무관심인 ‘부인’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심정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피해자의 처지에 공감한다는 것은 “상상력을 발휘해 다른 사람 [피해자]의 처지에 서보고, 다른 사람[피해자]의 느낌과 시각을 이해하며, 그렇게 이해한 내용을 활용해 당신[피해자를 접촉하는 사람들]의 행동지침으로 삼는 기술”을 발휘하는 것을 말하는바(김병화 역, 2013:13) 이는 피해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웃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그들에 대한 인권보호는 더 충실해 질 수 있을 것이다.

(2) 공감 유형과 이웃의 대응 방식

범죄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은 크게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사회적 고통, 경제적 고통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바 이에 공감하는 행동은 피해자를 공황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각 고통의 유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에 공감의 양상과 그 양상별 대응 방식에 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육체적 고통에 대한 대응 방식

주로 개인의 생명과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범죄들이 피해자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하게 된다. 살인·강도·강간·공갈·협박·폭행 등이 그러한 유형의 범죄들이다. 이런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생명을 잃게 되거나 불구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는데 사건발생 초기에 전적으로 외부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성경의 비유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죽었을 것이다. 범죄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에 공감하는 방법은 즉각적인 피해사실 신고 및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를 통해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될 것이다.

②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응 방식

대개 강력범죄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범죄피해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무시하는 것(부인) 등이 공감능력 결핍을 보여주는 사례 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남기기 때문에 이로 인한 삶의 위기상황이 초래된다. 그것은 인간의 평온한 자아 개념에 대한 침해로서 공포감, 분노, 우울증, 무력감, 수치심, 자괴감, 불신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정서를 수반한다(Kirchhoff, 2005:58). 정신적 고통이 다른 고통영역에 비하여 더욱 심각할 여지가 있는 것은 육체적 고통과 달리 정신적 고통의 영역은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기에 대응이 쉽지 않아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갈 수 있다는 점이다. 성경의 비유에 나오는 피해자는 폭행으로 옷까지 벗겨져 그 수치심과 공포가 더욱 컸을 것이다.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는 방법은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친절한 자세로 인내와 이해심을 발휘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회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전문가 연계를 통한 심리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③ 사회적 고통에 대한 대응 방식

가정폭력 피해자인 여성이나 성범죄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 사회 특유의 사회문화적 요인이나 편견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비난과 따돌림을 받을 수도 있기에 사회적 존속에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다(김재민, 2012:91).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사회관계망에 균열이 생김으로 인해 피해자는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비유 속의 피해자도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어 정상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오늘날 사회적 고통에 대하여 공감하는 방법은 가까이에 있는 사회구성원들이 포용력 있는 태도와 자세를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반인권적 편견을 교정할 수 있는 범시민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며, 사회적 따돌림을 인격에 대한 모독이자 폭력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유형의 폭력을 퇴치하기 위해 사회가 공동대응 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④ 경제적 고통에 대한 대응 방식

범죄피해를 당한 자들이 가장 먼저 현실적으로 당면하는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범죄피해로 인해 지출되는 경제적 비용의 문제이다. 범죄로 인해 신체손상을 입게 되면 치료비가 들게 되며,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소송비용이 지출되고, 직장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임금손실이 발생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비용 부담

이 증가된다. 이렇듯 범죄피해를 입은 이후 경제적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가정 구성원의 기초적 생존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고통에 공감하는 방법으로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각종 경제적 지원정책을 자세히 알려주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사회적 생존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제도, 배상명령 제도, 형사화해 제도, 긴급복지지원 제도, 뺑소니 피해자 구조 제도, 성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그러한 것들이다.

3. 공식성 유무 및 시간적 선후에 따른 대응 방식

(1) 공식적 대응과 비공식적 대응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기 전의 상황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한다.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수사하거나 법원이 범죄자에게 형벌을 선고하는 것을 공식적 대응이라 한다면, 민간전문가들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률자문 서비스를 한다든지, 정신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상담을 행한다든지 하는 것처럼 비공식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 대응과 비공식적 대응을 구분하는 기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공성을 지닌 기관이나 공무원이 대응을 하느냐 아니면 사설단체, 민간전문가, 일반인과 같이 공공성이 없거나 약한 기관 혹은 개인이 대응을 하느냐 여부가 될 것이다. 공식적 대응이건 비공식적 대응이건 이러한 대응을 하는 주체들의 불찰로 인해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를 2차 피해라 한다(Kirchhoff, 2005:56).

(2) 초기 대응과 후속적 대응

범죄피해자를 민간인이 발견하면 112에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긴급후송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되고,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신고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초동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초기대응이라

한다. 이때 피해자와 최초로 접촉하게 되는 민간인 전문가나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피해자 대응태도가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언행은 2차 피해를 야기 시킴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초동수사가 끝나고 나면 범죄자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후속 형사절차가 진행된다. 이때 피해자는 물질적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육체적·정신적 손상을 치유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심리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기도 한다. 이렇듯 수사기관이나 초동수사나 민간인의 초동조치가 끝난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한 대응을 후속적 대응이라고 한다.

4. 비유 속에 등장한 이웃들의 대응 방식

제사장은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종교지도자에 속하였고 레위인도 이스라엘과 같은 신앙공동체에서 제사장을 도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다른 일반인과 비교할 때 모두 ‘공인(公人)’에 해당하고 오늘날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응은 공식적 대응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의 종교공동체와 아무런 관련성도 없고, 어떠한 공적 지위도 인정할 수 없는 상황 이기에 이 사람의 대응은 비공식적 대응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비유 속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 하였지만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나쳐 버렸고 그 이후로도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 즉, 범죄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도 없었을 뿐더러 그들에 대한 초기대응 및 후속대응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반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 간 것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공감에 기초한 행동이었다. 아울러 상처를 소독하고 지혈을 한 후 여관까지 이동시킨 행위는 시간적 측면에서 초기 대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간호를 하고 추가적 치료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후속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Ⅲ. 범죄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이웃의 대응 분석

앞 장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권이 잘 보호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사회적 고통에 민감하게 공감하여야 하며, 공식적·비공식적 대응을 하게 되는 사회구성원들이 초기대응과 후속대응을 잘 해야 함을 기술하였다. 여기서는 누가복음 10:30-35을 중심으로 강도만난 범죄피해자에 대해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각기 어떻게 구체적 대응을 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제사장과 레위인의 대응

(1)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책무가 있는지 여부

누가복음 10:30-35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질문하자 예수님이 이웃사랑의 실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비유이다. 그 율법사는 누가복음 10:29에서 나오는 것처럼 영생을 얻기 위해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자 ‘자기를 옹케 보이려고’ 나의 이웃이 과연 누구냐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다. 구약 성경에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레위기 19:18)”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이 율법사는 아마도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가르침에 모순점이 있음을 드러내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림과 동시에 동족에게 선을 실친한 바가 있어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 같다(정중은 역, 1996:139-140).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선발된 자들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해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기에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 중의 하나가 범죄피해를 입게 되면 공식적 대응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중요한 이웃이었다(강병도, 2011: 신약 110)¹⁴⁾. 그들이 오늘날 국가공무원이 갖는 법적 지위와 동

14)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강도 만난 자가 유대인인지 아니면 이방인지가 명확하지

일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공동체의 특성상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임무가 그들에게 부여된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같은 민족 구성원이 범죄피해를 당한 사실을 목격했을 때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했었다. 설사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방인과 나그네를 잘 보살피라는 하나님의 이웃 사랑의 명령이 있었으므로 신앙인 차원의 종교적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보문번역위원회, 1996:291-292).

(2) 공식적 초기대응의 부재로 인한 인권보호의 실패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거리상으로 무려 27킬로미터이고 1,006미터 이상을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험한 길이다(존 맥아더, 2015:1079). 이러한 길에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진 채 죽도록 폭행당하여 버려진 장면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다가 목도한 상황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공동체 사회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여리고에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 길을 지났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공무를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수도 있다. 만일 공무수행을 앞세워 자신의 방관을 정당화 했다면 이는 '상황의 부인(否認)'을 통한 '공감실패'의 경우라 할 것이다(김병화 역, 2014:85, 90). 물론 그들이 여리고에서 처리할 공적 업무로 인해 바빴을 수 있다. 그리고 한 개인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대신 다수의 공동체 이익 보호를 우선시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나 사회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공동체 이익보호를 위해 한 개인이 가진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헌법 제37조).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공동체 구성원 중 한 명의 인간존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적어도 이에 필적하거나 이보다 더 심각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강도 만난 자가 당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위협요인을

않지만 문맥으로 보아 유대인 중의 한 사람인 것으로 추정된다. 유대인과는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사마리아인조차도 유대인인 피해자를 돕는데 동족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를 피해갔다는 것을 대조함으로써 참다운 이웃이란 지연과 혈연 등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배려의 마음으로 맺어질 수 있음을 더욱 명확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제거하는 것보다 더 급박한 공적 업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설사 공적 업무와 상관없이 지나가던 길이라 할지라도 죽은 시체에 접근하면 부정을 입게 되는 규례(레위기 21:1-3)가 있기에 그 규범을 준수하고자 피했다면 종교적 규율준수의 집착을 의미하는 '권위(權威) 주장에 의한 공감실패' 일 수도 있다(김병화 역, 2014:90, 98). 그러나 구약의 율법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좇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고(레위기11:44-45),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레위기19:18)으로 이끌어 가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쌍한 마음을 움직여 강도 만난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행동을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인애(仁愛, mercy)를 더 원하시기 때문이다(호세아 6:6).

2. 선한 사마리아인의 대응

(1)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책무가 있는지 여부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유대인 출신의 제사장 및 레위인의 대응과 유대인에게 개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¹⁵⁾의 대응을 대비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 길가에 쓰러진 유대인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그가 강도만난 자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살면서 지역적 연대가 있는 것도 아니요, 서로 간에 정치·사회·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공동체의 일원도 아니며, 범죄피해를 당한 유대인을 돌보라는 공적 임무가 부여된 것도 아니고, 실정법상으로 범죄피해를 목격한 자에게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던 것도

15) 사마리아 사람들은 앗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 그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유대인에게 천시를 받아 왔는데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시기까지도 그러한 천대와 반목이 지속되었다(강병도, 2011: 신약 147-148).

아니기에 적어도 법적·종교적 측면에서 사마리아인에게 인권보호의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이다. 다만, 한 인간으로서 자발적 선행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윤리적 비난만이 문제될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마리아인은 그 범죄피해를 당한 유대인을 자신과 상관없는 자로 바라보지 않고, 유대인들의 자신들을 향한 적대감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로지 박애주의에 기초하여 인간으로서 자기에게 부과된 도의적 의무를 자발적으로 실천한 자였다. 이렇듯 폭넓은 인류애에 기초하여 편견을 넘어서는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차원 높은 행동이라고 볼 것이다.

(2) 성공적인 비공식적 대응과 인권보호

그렇다면 위 비유의 강도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행한 사마리아 사람의 대응이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범죄피해자에 대한 대응 중에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신속히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앞서 언급하였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첫 반응이 바로 피해자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누가복음 10:33)’ 쓰러진 자 앞으로 다가가는 마음, 곧 동정심에 기초한 ‘이웃 사랑’이야말로 피해자 인권보호의 기본정신이자 핵심철학이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은 그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바꾸어 생각할 줄 아는 자세이기도 하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 누가복음 6:31)”는 예수님의 말씀은 남에게서 희생적 사랑을 기대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인바(강병도, 2011:신약성경 10)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바로 공감능력을 가져야만 가능하다.

사마리아인의 두 번째 대응은 범죄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응급구호조치를 행했다는 점이다.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수준의 범죄피해를 당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응급구호이다. 그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 소독을 한 다음 이를 싸맴으로써 지혈을 하였고¹⁶⁾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16) 이 당시 기름은 진통제의 용도로, 포도주는 상처를 청결히 하고 소독하는 용

록 인근 주막으로 이송을 한 후 일정시간을 돌봐 주었다. 이러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적 지원은 현대사회의 피해자 지원행정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이 사마리아인의 응급 의료행위가 강도 만난 자의 생명을 위험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이다.

사마리아인의 마지막 대응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누가복음 10:35)’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두 데나리온은 환자를 여러 날 돌볼 수 있는 금액으로서(Marshall, 2013:250)¹⁷⁾, 주막 주인에게 환자를 보살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의 응급치료를 지불하는 한편, 추가 치료비에 대한 지불약속까지 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촉진시켰다. 이는 범죄피해자가 마땅히 향유해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헌법 제34조)’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보장에 기여하는 매우 소중한 인권보호적 행위였던 것이다.

IV.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

1. 범죄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교육 강화

동족인 유대인이 강도에게 폭행을 당하여 거의 죽게 되어 길가에 버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었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무런 초기 대응과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는 율법의 형식은 지키면서도 정의(justice)와 자비(mercy)와 신실함(faithfulness)을 저버린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실천을 소홀히 한 행위로서(이사야 29:13, 마태복음 15:8, 마태복음 23:23), 사

도로 종종 쓰였다고 한다 (Morris, 1988: 206-210).

17)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물가수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 데나리온으로 12일분의 식량배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Morris, 1988: 206-210), BC 27년 이전의 로마제국 초기시대에 한 데나리온은 비숙련 노동자나 일반 병사의 하루 일당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다(<https://en.wikipedia.org/wiki/Denarius>).

람의 고통에 대한 공감능력이 낮은데 기인한 행위로 생각된다.

반면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 그에게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공감능력이 있었다. 그 공감능력의 근원에는 '인간존중'과 '인간존엄성'에 대한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명하신 이웃사랑의 정신과도 연결된다. 범죄로 인해 재물을 강탈당하며 폭행당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사람답게 살 권리가 짓밟힌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범죄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는 것은 파괴된 인간존엄의 현실을 원상회복 시키겠다고 하는 열정이 담겨있는 것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는 것이 된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식적 대응을 해야 하는 형사사법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물론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피해자를 돕게 되는 비공식적 민간인 전문가, 심지어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인간생명의 존엄함에 대하여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이른바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감교육이 불가결하다. 피해자 인권보호의 기본정신이 이러한 공감능력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⁸⁾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기 대응태세의 확립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초기대응에 실패하면 이후 후속대응이 아무리 잘 되어도 피해회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수사관이건 민간 전문가건 초기 대응을 하는 사람들은 민첩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응대하여야 한다. 민간인의 경우 신속한 신고조치, 응급구호조치, 유관기관 연계조치 등이 필요하겠으나, 수사관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피해자들이 수사관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제공 지원과 함께 경청기술 및 질문기술 등을 활용한 뛰어난 대화관리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8) 공감능력은 인간을 자신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 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죄악의 굴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자리할 때 더욱 풍성해 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창세기 1:27-31; 요한복음 3:16).

아울러 초기 대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응급의료체계를 잘 구축해 놓아야 한다. 피해자가 생명·신체에 손상을 입었을 때에는 의료적 차원에서 신속한 초기대응이 있어야만 범죄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응급환자로 분류하고 이러한 사람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2조).¹⁹⁾ 그러나 범죄피해자를 위한 이러한 응급 의료체계도 관계자들의 적극적 협조가 없이는 제대로 운용될 수 없다.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피해자 인권보호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3.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물질적 지원 시스템 구축

위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그 사마리아인이 단순히 불쌍한 마음만 가졌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범죄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되지 않도록 자기가 소지한 기름과 포도주를 소비하였으며, 자신의 개인 일정을 포기하고 환자를 돌봄으로써 자신이 계획했던 다른 여행의 기회가 상실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했고, 두 데나리온이라는 의료 및 간호비용을 지불해 주는 등 일정한 경제적 대가를 치렀던 것이다. 이처럼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지출이 불가피하게 된다. 오늘날의 표현을 빌리자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용, 소송진행을 위한 법률비용, 환자 이송 및 사건처리 등을 위한 교통비용, 피해자의 임금손실에 따른 비용, 전문가 상담비용 등 경제적 지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범죄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지속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치료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그 치료비 지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범죄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밝

19) 이때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는 응급의료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의료행위 중단을 못하며(동법 제6조, 제10조),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미수금이 발생했을 때 이를 대지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22조). 위기상황에 처한 범죄피해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있는 셈이다.

혀졌다 하더라도 체포되지 않은 경우,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경제력이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경제적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²⁰⁾ 더구나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의료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에 범죄피해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범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한 경제적 지원이 없었을 때 범죄피해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범죄로 인해 기초적 생존이 위협받고 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물질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두고 있는바(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제4조), 생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조금 및 지원금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범죄피해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V. 나오는 말

길가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이를 피하여 지나갔던 비유 속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대에 유력한 신앙인들이었다. 그런데도 왜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움을 손길을 내밀지 못했을까? 그것은 그들이 인습적 신앙에 갇힌 채 하나님이 내려주신 율법과 규례의 참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²¹⁾ 인습적 신앙에 젖어 있는 신앙인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종교적 규범과 조상들로부터

20) 체포된 범죄자가 경제력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범죄피해자가 범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일은 벽차고 힘든 여정이 된다. 따라서 국가가 범죄자의 손해배상액에 상당한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범죄자를 상대로 구상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유리하다고 볼 것이다.

21) 리처드 아스머와 프리드리히 슈바이처는 기독교인들이 공적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탈인습적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신앙인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자아가 아니라 타인과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 타인을 존중하면서 상대방과 합의하고 함께 참여하는 ‘평등적 자아(equal self)’, 개방된 의사소통의 공간에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개방적 자아(open self)’를 가진 자라고 말한다(연세기독교교육학포럼 역, 2006:251-253).

터 물려받은 문화적 전통에 담겨있는 의미,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신앙의 참 본질은 파악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율법조항의 준수여부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노력하게 된다.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 예수님으로부터 호되게 비판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 그러한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비유 속의 강도만난 자가 설사 적대적인 사마리아인이었다 하더라도 그가 범죄 피해를 당해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면 제사장은 문화적 전통과 종교적 규율을 넘어서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본질을 먼저 붙들었어야 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단일의 실체를 구성한다(Marshall, 2013:251).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숙한 신앙인은 타인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연결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자이고, 상대방도 나와 동등하게 존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이며,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열고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자이다. 비록 위의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이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범죄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자기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돌봐주는 모습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을 귀히 보시고 그 존엄한 인격이 온전하게 보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이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강도 피해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정성껏 약자를 섬겼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 사랑’의 정신은 범죄피해자 인권보호의 핵심철학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외국 문헌〉

- Doerner, W.G. and Lab, S.P., (2002). *Victimology*. Cincinnati: Anderson Pub. Co.
- Jerin, R.A., and Moriarty, L.J., (2010). *The Victims of Crime*. New Jersey: Prentice Hall.
- Kirchhoff, G.F. (2005). *What is victimology?* Monograph Series No. 1.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 Kirchhoff, G. F. and Morosawa, H. (2009). *The study of victimology*.

- Basic considerations for the study of theoretical victimology.*
In Winkel, F.W., Friday, P.C., Kirchhoff, G.F., & Letschert, L.M. (eds.) *Victimization in a multi-disciplinary key: Recent advances in victimology.* (pp.271-312).
- Krznaric, R. (2013). *Empathy. A Handbook for Revolution.* 김병화 역. (2014). 『공감하는 능력』, 서울: 더퀘스트.
- Marshall, C.D. (2013). Compassion, Justice, and the Work of Restoration. *The Conrad Grebel Review* 31, no. 3 (Winter).
- Morris, L. (1988). *Luke: An Introduction and Commentary.* vol. 3., TNTC.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 Osmer, R.R. and Schweitzer, F.L., (2003). *Developing a Public Faith: New Directions in Practical Theology.* 연세기독교교육학 포럼 역, (2006). 『공적 신앙과 실천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국내 문헌〉

- 강병도, (2011). 『툼슨 II 주석 성경』. 서울: 기독지혜사
- 김용세. (2009). 『피해자학』. 서울: 형설출판사.
- 김재민. (2012). 『피해자학』. 서울: 청목출판사.
- 김철수. (2004).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 보문번역위원회 역. (1996). 『스필전 설교전집』. 대구: 보문출판사.
- 정재길 외. (2010). 『법과 생활』, 서울: 도서출판 오래.
- 정중은 역. (1996). 『신구약 성경주석, 누가복음』. 서울: 크리스찬 서적.
- 존 맥아더, (2005). 『맥아더 성경 주석』. 서울: 아바서원

〈인터넷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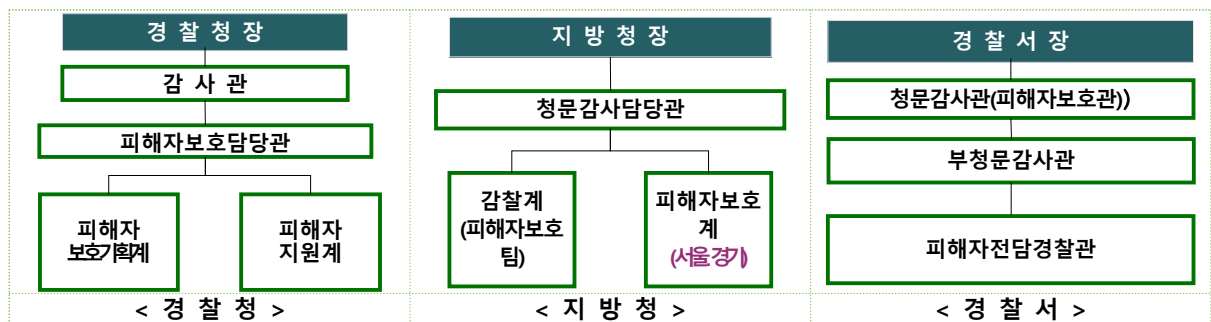
-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_dic.jsp (검색일 2016.1.19).
- <https://en.wikipedia.org/wiki/Denarius> (검색일 2016.2.5.).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16000572&md=20150716115118_BL, (검색일 2016.2.12).

1. 배경 및 개념정립(4-7p)

전통적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증인 등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 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피해자의 개념을 형소법 상 협의의 개념이 아닌 범죄피해자보호법 상 피해자로 넓게 보고 있으며,

경찰단계가 피해 직후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최적기로서, 경찰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법적 의무로 이행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는 공식적 대응의 주체이자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공인으로서의 이웃이라 할 수 있다.

〈표-1〉 피해자 보호 경찰 조직체계



2. 대상 사건

피해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건에는 ‘필수 사건’과 ‘요청사건’이 있으며 **필수사건**이란 살인, 강도, 방화와 같은 **강력사건**, 체포·감금, 약취·유인, 중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일부 행위와 같은 **주요 폭력사건** 및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사건 같은 기타 **중요사건**이며, **요청사건**은 각 기능에서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이다. ‘필수사건’은 사건초기부터, ‘요청사건’은 지원 요청 시부터 지역 및 개인 맞춤형 세부 정보제공과 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 추진방향 - ‘비공식적 대응의 공식적 대응화’(8-16p)

아직까지 범죄자에 대해 처벌이라는 공식적 대응, 피해자에 대해 NGO등을 통한 지원 등 비공식적 대응 기조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도 초기단계부터 법적·공권적 개입을 통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요구된 공감능력을 기초로 ‘**공감⇒지원⇒안정**’의 공식적 대응 추진

〈표-2〉 단계별 피해자보호 대응체계

단계별	활 동 지 침
사건초기 (공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력사건 등 발생 시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 심리적 안정 유도하고 NEEDS를 파악 (필요 시 현장 출동) ▶ 피해자 권리 및 구조제도 등에 관한 기본적 정보 제공
사건진행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검증·임시숙소 퇴실 관련 필요 시 동행 ▶ 피해자 신변보호 관련 필요한 조치 실시 ▶ 피해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맞춤형으로 설계, 전문단체·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연계 ▶ 노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단순 연계에 그치지 않고, 직접 동행하거나 신청절차 대행
사건후기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인 연락과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 복귀 도모 (사후 모니터링)

4. 구체적 활동내용(16-20p) - 최근 시책 위주로

(1)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강화 - 공감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범죄피해자보호법 제8조의 2 신설 ('15. 4. 16부터 시행)

〈표-3〉 단계별 피해자보호 대응체계

분류	현행	개선
대상	경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자	모든 범죄피해자
제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진술권 · 수사진행상황 · 상담지원, 경제적 지원 · 개인정보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 기타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정보
절차	'권리고지 확인서'에 피해자 서명 후 수사기록에 첨부	대면조사 시 안내서 교부, 조서 기재 (사정에 따라 기타 방법 활용)

(2) 손실보상제도 구축 - 지원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현장의 경우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에서 정리 비용을 지원하나, 기타 피해현장에 대한 정리비용은 경찰관직무집행법('13.4월) 및 동 시행령('14.2월 개정) 후 피해자 주거지 등에서 범죄가 발생, 경찰관의 현장 감식 등으로 인해 오염되어 전문적인 특수청소가 필요한 경우 물건의 멸실·훼손 시 수리비 상당 금액, 물건의 멸실·훼손 외의 재산상 손실 시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청구(경찰서)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지방청) ⇒ 승인 시 계좌로 지급하고 있다.

(3)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 지원

'15. 10월부터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를 예방하고 신변보호 강화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신변보호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 스마트워치 제원 및 주요기능 현황 >



- ▶ 제원 : 4.3cm×4.3cm(51g) / 연속통화 90분, 대기 80시간
- ▶ **긴급버튼**을 누르면 112, 스마트폰 등 최대 4인에게 신고기능(1순위는 전화연결, 여타 SMS)
- ▶ 스마트폰으로 대상자 **위치를 지도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
 - ※ 긴급신고 시에는 상황실에서 위치조회 가능
- ▶ 긴급상황 시 전화를 받지않는 경우 **강제 수신, 주변음성 청취**
- ▶ **안심존(200-5km) 설정** 후 이탈 시 메시지 자동발송

(4) 상담 및 음악치료 - 안정

범죄발생 직후 피해자들은 정신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는 충격 - 혼란 (Impact-Disorganization) 상태에 빠지며 이로 인한 트라우마(Trauma) 극복을 위해 주기적인 심리 상담과 음악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 음악치료사를 피해자보호위원으로 위촉, 피해자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음악치료를 시행하고 있음